

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현장의 교섭절차가 진행되면서 교섭 사례가 축적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6.5.(금) 서울경제, “노봉법 시행 3개월...실교섭 단 6건”

2. 설명 내용

- 5.29. 기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56개소이며,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완료한 원청은 23개소로, 그 중 6개소는 실 교섭에 들어갔고, 나머지 17개소는 노사 간 교섭 상황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 - 노사의 사정이나 협의 상황 등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교섭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,
 - － 향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실 교섭 진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교섭 사례를 기준으로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
- 아울러, 자율적으로 교섭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34개소인 반면, 제도 시행 초기에 노동위원회 등의 사용자성 판단을 거치고자 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있음
 - 그 과정에서 지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을 토대로 곧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22개소, 재심을 신청한 원청은 9개소인 점을 감안하면
 - － 상당수의 원청이 지노위의 판단에 따라 교섭에 임하려는 경향이 있으며, 모든 사안에서 중노위의 판단까지 받으려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

- 따라서 시행 전 예상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도입에만 급급했다거나,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도함
- 향후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원청이 법에 따른 교섭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실 교섭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

담당 부서	노사협력정책관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611)
	노사관계법제과	담당자	서기관	정장석 (044-202-7615)

